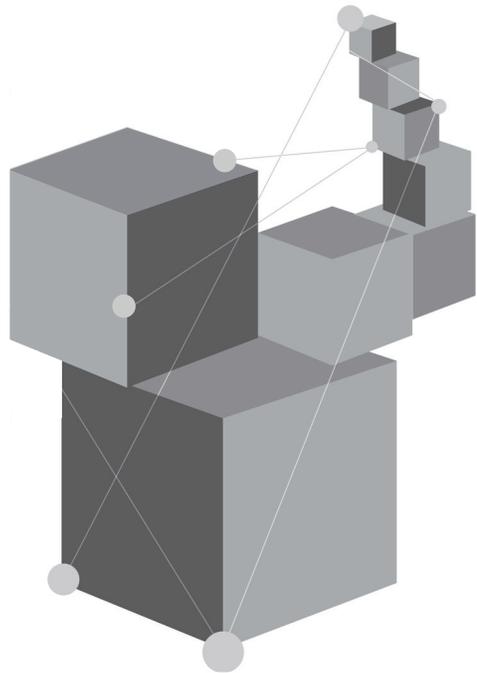


취재원 명시와 보호



1.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 2012-1080 신문윤리강령 위반 충북일보 발행인 변 근 원

<주문>

충북일보 2012년 5월 9일자 7면 「‘권력’ ‘교육’ 따라 움직이는 집값 ... “분당 수준까지 올라갈 것”/세종시 아파트 공급 중간 결산해 보니」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충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의 최고 브랜드는 ‘세종’이다. 그래서 요즘 세종시와 인근 지역 아파트, 중개업소 등에서는 ‘세종’이란 수식어가 들어가는 상호가 넘쳐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 공무원 등에게 우선 70%를 특별 배정한다. 나머지 15%는 ‘다자녀 가구’ 등 또 다른 집단에 특별 분양된다. 따라서 일반인은 나머지 15%를 갖고 나눠먹기를 하다 보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인도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특별공급 대상 공무원의 50% 이상이 이미 분양을 받은 데다 공급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다.(중략)

◇ 세종시 전망=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진다. 그렇다면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수도권 분당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가

이익을 달지 않는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대 요인은 ‘권력’과 ‘교육’이다. 이는 서울 강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세종시는 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총리실을 비롯한 대다수 정부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거물급인 이해찬(민주통합당)이다. 교육 측면에서 보면 우선 세종시에 들어설 모든 학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스마트스쿨’이다. 게다가 외국어고교가 내년, 과학고교가 2014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의 3.3㎡(평) 당 평균 분양가는 750만원선이다. 부산 해운대(800만원)와 비슷하나 △강남구(3천200만원) △분당(1천670만원) △판교(2천800만원)보다는 훨씬 싸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세종시 아파트들이 장차 분양가의 2배 이상인 분당신도시 아파트 수준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물론 제목에까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다.

기사는 총리실을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들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고, 각급 학교들이 첨단시설을 갖춘 ‘스마트스쿨’인데다 외국어고교와 과학고교가 잇따라 개교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이밖에도 교통, 편의시설, 문화 인프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내외 경제 흐름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합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기관 이전과 교육 여건만을 이유로 들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의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라는 막연한 취재원을 앞세워 세종시 아파트들이 분당 아파트 가격 수준까지 뛴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근거가 크게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의견인지 그 경계가 애매하다 하겠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인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투자 리스크는 애써 외면한 채 투자메리트만 부각시킨 위 기사는 정보가 부족한 독자

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3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1월 31자 9면 「네덜란드 ‘파트타임’은 대부분이 정규직,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에바 파스코빈스(34·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물류회사에서 해상 화물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일주일에 나흘만 회사에 출근한다. 오전에 갈 때도, 오후에 일할 때도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U)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그녀는 공부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지켜지면서 정규직과의 차별 없이 하루에 필요한 시간만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파트타임이라고 하면 저임금·비숙련 노동자 위주의 값싸고 질 낮은 일자리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비정규 임시직이 대부분인 한국과 달리 네덜란드의 파트타임은 정규직에 속한다. ‘기간비례 원칙’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풀타임 근로자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와 대우가 보장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많은 네덜란드인들이 전일제 근로 대신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과 여성, 상대적으

로 낮은 직급에서 근무시간의 유연한 조정이 더 활발하다. 파스코빈스의 남자 친구 역시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다. 회계사인 파스코빈스의 친구는 아예 일주일에 하루이틀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출근시간 역시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해 결정한다.

‘파트타임의 천국’으로도 불리는 네덜란드의 노동환경은 1982년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네덜란드는 당시 2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기침체에 높은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지나친 사회복지 지출 부담 등이 겹치며 ‘네덜란드병(病)’으로 불릴 정도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악순환을 끊고 새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노사 대표는 정부의 중재하에 대타협을 이뤄냈다.

노동계는 임금 동결을 약속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로 화답했다. 정부 역시 세금 감면과 공무원 연금 축소 등으로 힘을 보탤 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이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그 쟁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게재하고 있는 기획시리즈물 중 하나다. 위 기사는 네덜란드의 실태를 사례로 취재해 소개하고 있는데 기사의 도입 부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암스테르담의 에바 파스코빈스라는 여성 노동자를 소개하면서 이 여성이 일하고 있는 사진도 곁들였다.

문제는 네덜란드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성 노동자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취재했는지 그 과정이 기사에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사말미에 ‘암스테르담 | ○○○ 기자’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사가 네덜란드 현지에서 취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기사는 이메일,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취재를 했는지, 혹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재했는지

등을 일체 밝히지 않았다. 또 기사 옆에 게재한 에바 파스코바의 사진 또한 누가 촬영했는지, 취재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다.

이같은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기사의 정확성,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취재원의 보호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한 기자가 기사에서 취재 과정과 취재원에 대해 밝히는 것은 기사의 신뢰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보도윤리의 기본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